‘감염원’ 전남대병원… 환자들 ‘발동동’

국가 지정 감염병 대응 거점 병원서 n차 전파…1병동 격리 폐쇄
외래진료 중단, 처방전 받으러 30m 장사진…‘의료 공백’ 현실화
남광주시장 등 주변 상인들, 감염 위험 노출·손님 급감에 ‘시름’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일부 병동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된 가운데 17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1동(본관공) 입구에서 환자들이 처방전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당장 어디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걱정입니다.”

국가 지정 감염병 대응 거점 의료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n차 코로나19 전파가 잇따르면서 우려했던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주변 상인들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터로 나왔지만 손님이 뚝 끊겨 시름이 깊다.

17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본원 안팎은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병원 입구에는 약 처방을 기다리는 방문객 행렬이 30m가량 늘어섰다.

감염병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약 처방만 가능합니다. 대기자 간 간격을 두세요”를 외쳤다.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전남대병원은 응급실 운영과 외래진료를 오는 22일까지 중단했다.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1동(본관동) 입원실 등이 있는 5층부터 11층까지는 폐쇄됐고, 내부 의료진과 환자들은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됐다.

격리 대상이 아닌 외래 환자들은 기존 처방전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여기저기서 환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외래 환자들은 의자와 가림막도 없는 길목에서 짧게는 30분 평균 1시간가량 선 채로 대기했다. ‘몸도 아픈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며 곳곳에서 아우성이었다.

진료 중단 소식을 미처 몰랐던 장모(70)씨는 “다른 병원에 가면 의료장비·기술을 갖춘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한다. 소견서까지 받아서 왔는데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며 발걸음을 되돌렸다.

중증 환자인 어머니를 대신해 병원을 찾은 강모(43)씨는 “어머니가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당분간은 약으로 버텨야 할 어머니의 건강이 염려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중증 환자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인데도, 긴급 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심장 질환을 앓는 강모(70)씨는 “광주에서 유명한 병원인 만큼 환자들이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높다. 명색이 지역 대표 의료기관인데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추가 방역도 제대로 못해 진료 차질로 이어지니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일부 대기자는 병원 관계자를 향해 “당장 위급한 중증 환자도 아픈 몸을 이끌고 약을 받으려고 서 있다. 대기자의 건강 상태부터 확인해 우선 처방을 하거나 다른 병원과 적극 연계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병원과 인접한 남광주시장 등 주변 상가도 근심이 깊었다.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77·여)씨는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할 병원이 오히려 코로나19의 근원지가 돼 걱정이다. 그 피해는 환자와 상인,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할 때다”고 전했다.

카페 직원 김모(28·여)씨는 “병원 환자와 의사들이 자주 방문한다. 코로나19 증상은 없지만, 혹시나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았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주 이후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

병원 앞을 오가는 행인은 1분에 5~6명. 모두 잰걸음으로 길을 오갈 뿐 노점상과 시장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병원 근처 정류장 주변의 한 노점상(55·여)은 “보통 오전 외래 진료 환자로 사람이 길가에 넘쳐나는데 지금은 행인이 3분의 1로 줄었다. 물건은 싱싱할 때 팔아야 하는데 손님이 없어 재고만 쌓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동취재본부

확진자 나온 광산경찰서 일부 업무 중단…치안 공백 우려

치안 밀접 관련 부서…청사 출입문 일부 통제·이동 자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부 부서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

치안 공백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모 부서 경찰관 A 경위가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광주 570번째 환자로 분류됐다.

이에 A 경위가 근무한 청사 본관 출입이 통제되고 긴급 방역이 이뤄졌다. 본관에 위치한 형사계·강력계 등 일부 부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되 일부 조사 일정을 미뤘다.

A 경위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동료 경찰관 116명은 이날 오전 광산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마쳤다.

검사 결과 통보까지 자가 격리 중이다. 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A 경위가 근무했던 청사 3층에 있는 생활 안전·질서계, 경비작전계·보안계·외사계 등 일부 부서의 인력이 격리되면서 치안 업무에 대한 공백 우려도 나온다.

총포·화약 단속, 각종 범죄 예방 업무, 시위·집회 관리, 외국인 범죄 관리 업무 등 모두 치안과 밀접한 부서들이다.

A 경위가 구내식당 등 다중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 공무원 사이에서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경찰 공무원들은 본관 정문을 제외한 출입구를 전면 통제한 뒤 불필요한 움직임을 자제하고 있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을 알 수 없어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다. 결과에 따라 청사 출입 통제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청사 내부에 대한 소독 작업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 경위는 전남대병원 입주 업체 직원과 접촉,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임형택 기자

대형화물차, 자전거 탄 80대 들이받아…1명 숨져

대형화물차가 길을 건너던 80대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다.

1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5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교차로에서 50대 기사 A씨가 몰던 25t 화물차가 자전거에 탄 80대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 A씨가 길을 건너던 B씨를 미처 발견 못해 난 사고로 보고,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집합 금지 명령서 떼고 영업한 50대 유흥업주 벌금형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명령서를 떼고 영업한 50대 유흥업소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표시 무효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5월 12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지역 유흥업소에 부착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발동합니다’는 내용의 명령서를 납작한 쇠로 떼어내 강제 처분 효용을 해한 혐의다.

또 A씨는 5월 16일 오후 11시께 지인 2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5월 12일 오후 6시부터 같은 달 26일 오전 6시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장은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 지인 2명만 주점을 이용하고 있던 점, 방역·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드러누워 꽥꽥’ 응급실 상습 행패 50대 벌금형

상습적으로 응급 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4일부터 31일 사이 광주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에게 욕설한 뒤 4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워 응급 의료 행위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응급실 바닥에 드러누워 의사·간호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환자 보호자들에게 ‘똥파리들’이라고 말하며 비상식적인 언행을 반복했다.

A씨는 당시 면회시간이 아닌데도 응급 중환자실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퇴거 요구를 따르지 않고, 진료 중인 전공의에게 ‘간호 조무사보다 못하다. 공부 좀 더 하고 와라’고 시비를 걸었다.

A씨는 자신의 동생이 요양병원에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것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응급 의료에 대한 방해 행위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A씨가 수차례 응급 의료를 방해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납품업자와 짜고 행정실 등친 학교 설립자 가족 집유

자신과 함께 일하는 학교 행정실 직원을 속여 정품보다 낮은 단가의 물건을 납품하고 차액을 가로챈 학교 설립자 가족과 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B(49)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 모 학교 법인 교직원 A씨와 사무용품 납품업자 B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생 프린터 토너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과다 계산하는 방법으로 법인으로부터 15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품보다 3분의 1가량 저렴한 재생 토너를 납품한 뒤 정품 가격으로 정산했고, 차액을 절반씩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